



##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글 기모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예방의학전문의, 교수)



2020년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6월 말 현재 214개국에서 8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43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는 감염병 증가 시대,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역질과 기근의 시대, 근대는 범유행 감축 시대, 현대는 퇴행성 인조질환시대와 신종감염병 출현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 우리는 현재 신종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다가올 신종감염병의 전파력, 치명률 등을 고려해 신종감염병 대비 전략을 준비해야 했다.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대비해야 할 중점 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대비의 수준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다음 7가지 항목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감염병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실험실 강화이다.

**둘째,** 공중 보건 방역체계 강화이다. 보건 교육, 깨끗한 물과 음식 유통 시스템, 기본 예방 접종, 만성질환 관리 지원 등의 기본 공중보건 시스템에 더해 공중 보건 방역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에 비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 향상이 시급하다.

**셋째,** 보편적 건강 보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나 여전히 치료 중심이어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인권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 인력 양성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약 12만 명으로 인구 1,000명당 2.3명인데 OECD 국가의 평균 3.4명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5만 명이 더 필요하다.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므로 최소 1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한국 의사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감염병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과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감염병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병에 의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전개되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돼 보건의료부문 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노동, 국방 등 다른 부문도 위기 상황에 동원되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일반 시민은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사이면서, 감염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소가 되므로 감염병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종감염병은 모르는 질병이므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은 그때까지 밝혀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정책이 바뀔 수 있음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일곱째,** 감염병 팬데믹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 특정 국가에서의 감염이 다른 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이 낮은 국가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에 참여해 지원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주의 측면에서 당연하다. 또한 감염병의 발생 지역에서 예방과 관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유사 시 해당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대비와 대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2014년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했을 때 한국에서도 3차에 걸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사례가 있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의 대사관에 보건역학전문가를 파견해 해당 지역의 교민 지원과 함께 감염병 연구 정보 수집을 해 한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만의 역량으로 질병 유행을 끝낼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 따라서 WHO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지역의 인접 국가 간의 정보교환과 방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보통의 공중보건위기상황은 대비, 대응, 회복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비, 대응 이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기전 대비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처와 같은 조직 개편과 부족한 의료 인력 수급, 상황별 병상 활용 계획 등을 중앙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모두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서 고양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화상진료 도입, QR코드 출입 시스템 추진, 길거리 손 세정대 설치 등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전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자체의 다양한 선진적 대응 전략도 필요한 때다.

